

재북 일본인의 '일시 귀국' 준비개시한 듯 (이시마루 지로)

'특정실종자' 포함? 재북일본인의 조사 계속돼

북일간에 합의 한, 납치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북한재류 일본인의 조사에 대해 북한 당국은 9 월 초 제 1 차 보고를 제시할 듯 하다. 이와 함께 일본에 친척이 있는 재북일본인의 '일시 귀국'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다. 또한, 자신의 의사로 입국해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에 대한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아시아프레스 북한 내부 취재협력자가 전해 왔다.

'일본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 일시 귀국시킬 준비를 시작했다'

7 월 하순, 북한 내부에 사는 복수의 아시아프레스 취재협력자들이 전해왔다. 협력자들은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나 지방의 노동당 간부, 일본에 연고를 둔 사람들을 직접 만나 취재했다.

양강도에 사는 취재협력자 A 씨는 7 월 말, 일본인 조사를 맡고 있는 보위부원과 귀국사업으로 북한에 건너 온 일본인 배우자 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일본에 친척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일본에 돌려보내기 위해 (국내적인)절차를 시작하고 있다. 다만 귀국이라 해도 일시적인 것으로, 말하자면 친척방문 같은 형태. 이를 위한 교육도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

또 평양에서 중국으로 출국해 온 취재협력자 B 씨도, 알고 지내는 당 간부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며

'일시 귀국시킬 일본인치의 후보자를 고르고 있다고 한다. 영주 귀국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가족이 북한에 있는데다 일본에서 살고 싶다고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위부에 의한 재북일본인의 조사는, 6 월부터 시작되고 있었다고 아시아프레스는 확인하고 있다. 소식의 확인과 일본에의 귀국의사를 묻는 방식이다. 주 대상은 1959 년부터 84 년까지 이어진 재일조선인의 북한 귀국사업으로, 조선인 가족과 북한에 건너 간 일본인, 이른바 일본인 배우자와 일본 태생의 아이들이었다.

게다가 귀국사업 외에 북한으로 건너온 일본인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몇 번 들어왔다. 이것은 대체 어떤 일본인인가? 그리고 이 '알려지지 않은 일본인'에 대해, 어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알려지지 않은 일본인'에 귀국을 권유하는 보위부

'일본에서 북한으로 올 때 적은 이름이 본명인지 아닌지, 일본에서 죄를 범하거나 빚을 저 도망치기 위해 북한으로 온 것이 아닌지 등을 보위부가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도 좀처럼 진실을 말하지 않아, 보위부원이 이웃 주민들을 접근시켜 몰래 신원을 알아내라고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북한 북부지역에 사는 협력자 C 씨. 일본인 조사를 담당하는 보위부원에게서 직접 얻은 정보라고 한다. C 씨에 따르면, 보위부원은 '일본에 돌아가고 싶다면 보내주니까'라고 귀국 의사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다고 한다.

필지도 잘 몰랐지만, 북한에 자신의 의사로 건너가 지방도시에서 일반 주민으로 평범하게 사는 일본인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사회주의와 북한의 체제에 동경을 품은 사람, 개인적 트러블과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 일본에 있을 수 없게 된 사람, 또한 죄를 저지르고 일본에서 국외로 탈출한 사람이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다.

5 월 29 일, 북일 간에 '모든 재류 일본인의 조사'를 실시할 것을 합의했고 발표됐다. 이후 아시아프레스에서는 북한 각지의 취재협력자에 조사를 의뢰, 납치 피해자, 일본인 배우자, 잔류 고아 외에 '알려지지 않은 일본인'의 조사에 북한 당국이 주력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왔다. 그 이유에 대해, 앞서 말한 취재협력자 A 씨는 보위부 간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저쪽(일본)에서는 조선이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자꾸 말하는데, 문제가 있어 (자신의 의사로) 조선에 입국한 일본인이 많이 있다. 조선에 있는 일본인은 납치된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증명하기 위해, 이들의 신원을 조사해 일본으로 돌아가기를 권하고 있다고 한다'

◆'특정 실종자'도 포함? 재류일본인의 조사보고

일본정부는 '납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도 북한 측에 명단을 제출해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일본 측이 제시하는 납치피해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피하고 싶을 것이므로, 일본이 제출한 명단 중에 자신의 의사로 북한에 입국한 '알려지지 않은 일본인'을 포함해 보고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하고 필자는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일본인'이 북한으로 입국할 때 가명을 사용했거나 경력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했다면 일본 측의 명단과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먼저 보위부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일본인'의 신원 재조사를 한 다음 일본으로의 귀국을 권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북한 내부의 취재협력자들은 일본인 배우자나 '알려지지 않은 일본인'들이,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아도 '일본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앞서 말한 취재협력자 C 씨는, '조선에서는 말 한마디 실수해도 체포된다. 모두가 그런 것을 알고 있으니까, 누가 정직하게 '일본의 친척을 찾고 싶다. 일본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겠는가. 보위부에서는 '신원이나 경력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일본에 보내준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좀처럼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